

‘반쪽짜리 조사’ 논란에도 “용역결과 폐기 없다”

■ 문화재청 왜 이러나...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이 지난해 진행한 ‘사찰 문화재관람료 징수 실태조사’ 관련 조계종과 사찰 협의 없이 진행돼 반쪽짜리 조사라는 논란에도 연구용역결과를 폐기하지 않겠다고 해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19일 문화재청은 종단으로 보낸 공문에서 폐기불가를 공식화했다.

지난해 문화재청은 종단 및 해당 사찰과 사전 협의 없이 10개 사찰에 대해 ‘문화재관람료 징수 실태조사’를 벌였다. 이를 뒤늦게 인지한 종단이 지난해 11월부터 사과와 재발방지, 연구용역 결과물 폐기를 요구하며 3차례 공문을 보냈음에도 제대로 응대하지 않았다. 되려 공무 집행을 막고, 압력을 행사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종단이 확실한 입장을 제차 요구하자 비로소 폐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뿐만 아니라 오락가락 한 해명으로 불교계의 공분을 샀다. 문화재청 정책총괄과 담당자는 지난 17일 본지에 보낸 답변서에서 앞뒤가 맞지

종단 3차례 걸친 공문에도 공무방해 압력행사 ‘운운’ 조사대상 방법에 대해서도 답변할 때마다 ‘오락가락’...

않는 변명과 해명으로 일관했다. 특히 조계종 소속 10개 사찰에 대해 문화재관람료 징수 실태를 조사하면서 종단과 해당 사찰을 협의대상으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문화재청의 대답은 납득하기 어렵다. 국보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 60% 이상이 불교성보이고, 조계종은 단일 단체로는 가장 많은 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다. 게다가 종단은 지난 2004년 문화재청이 차관청으로 승격하는데 앞장서 왔고, 2015년에는 상시적 협력체를 구축하자는 MOU를 체결하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협의대상으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말은 이런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거나 부정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태조사와 관계없이 청 관계자가 사찰을 현지 점검했다는 말도 지난 12일 본지와 통화에서 한 말과 달라 주목된다. 당시 해당 사찰의 입장을 어떻게 청취했는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담당자는 “5개 사찰 정도는 중무실장을 만났다. 나머지 사찰은 ‘예전 자료’를 참고해 입장을 정리했다”고 답변 바 있다.

질의서에서는 이런 입장을 바꿔 연구용역과 관계없이 민원발생 사찰을 현지 점검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평 용문사, 속초 신흥사, 구례 화엄사 등을 현지 점검한 것은 연구용역 수행과는 관계없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사찰을 우리청이 직접 현지 점검하고 해당 사찰 측과 민원 해소대책 등을 상호 협의한 것”이라는 게 문화재청 해명이다. 앞서는 조계종과 사찰을 협의대상으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답하고, 다른 질문에서는 상호 협의를 언급한 것이다.

게다가 현지 점검했다고 밝힌 세 곳 중 두 곳은 문화재청 관계자를 만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논란은 거기서 끝이 아니다. 문화재청은

“이번 조사가 일반등산객 입장에서 관람료 징수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것”이라고 말해 사찰 입장을 청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모면하려는 처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정현스님은 이 같은 문화재청을 비판했다. 조계종을 협의대상으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해명도 문제고, 종단과 해당 사찰 입장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연구용역을 진행한 것은 형세낭비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조사와 관련해 문화재청장이 조계종에 사과할 뜻이 있다는 것이 문화재청 대변인실을 통해 확인됐다. 안형순 문화재청 대변인에 따르면, 나선화 청장은 19일 불교방송 인터뷰에서 일반적으로 사찰 문화재관람료 징수 실태를 조사하고 조계종을 협의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고 한다. 그러나 종단이 주요하게 요구한 연구용역 폐기를 거부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아, 비판은 쉽게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어현경 기자 eonald@ibulgyo.com

문화재청장 공식사과 재발방지 약속 ‘요구’

총무원 문화부장 정현스님 교구본사주지협의회서 밝혀

“문화재청에서 문화재관람료 사찰 10곳을 선정해 ‘사찰 문화재관람료 징수 실태조사’를 하면서 종단 및 당해 사찰과 협의 없이 임의대로 진행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

지난 19일 제6교구본사 마곡사 연화당에서 열린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 제49차 회의에서 총무원 문화부장 정현스님이 이같이 보고했다.

특히 문화부장 정현스님은 ‘사찰 문화재관람료 징수 실태조사’의 용역 사업 자체의 문제점과 용역 수행자의 적절성에 대해 지적했다. “사업 대상을 사찰 문화재관람료로 한정해 사찰의 관람료 징수가 문제점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문제점이 있다는 전제 하에 과업을 지시해 결과물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편향적 의도를 보였다”며 “특히 용역 수행처인 녹색연합 부설 녹색사회연구소는 환경문제 연구소로 문화재에 대한 전문성이 없고 녹색연합 자체가 관람료 반대 입장을 가진 이해당사자로 객관적 용역 수행이 불가능해 제척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정현스님은 이에 “종단은 용역 결과물 폐기와 문화재청장 공식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책임자 문책 등을 요구했다”며 “앞으로 연구용역 수행업체 선정과정 및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등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과 필요시 감사원 감사청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문제에 대해 직지사 주지 범등스님은 “일반적인 생각에는 사찰이 문화재관람료 징수로 돈이 많은 것처럼 비취지고 있지만 실제 징수해 봐야 사찰 운영비의 일부분 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며 “문화재 관리를 스님들이 하지 않고 일반 관청에서 한다면 비용이 얼마나 들겠는가라는 것을 종단차원에서 용역을 취소 연구하고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무원장 스님 신년회견 문 요약 보고와 주지인사고과제 확대시행 방안에 대한 보고, 문화재청 관련 현안 보고, 분담금 제도개선 방안 보고, 전통사찰 전수조사 사업 부등산조사 현황 보고, 교육원 연수교육 및 출가지도법사 관련 등의 종단 현안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이어졌다.

한편 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오는 3월23일 오후2시 제5교구본사 범주사에서 제50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시영 총정지사장 isy@ibulgyo.com

■ 총무원 예방한 ‘대선 유력주자’ 문재인·반기문...

“전통문화·차별금지” 총무원장스님 당부에

文 “정치가 가야할 방향” 潘 “유엔헌장 기본원칙”

올해 19대 대선을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1·2위를 다투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잇따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했다. 문 전 대표와 반 전 총장의 이번 예방은 사회 여러 현안에 대해 불교계로부터 조언을 구하고 소통을 보다 강화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9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신년하례 법회 참석에 앞서 총무원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총무원장 스님은 전통문화와 환경의 가치를 강조하며, “개발과 보존이라는 상충된 개념 사이에서 균형과 접점을 찾을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특히 옛 한전부지에 건립 예정인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개발계획 종단과 관련한 봉은사 역사문화환경 보존활동을 강조하며, “프랑스 파리를 방문했을 때, 59층 높이의 가장 높은 건물이 시민들 사이에서 ‘검은 과물’로 불리고 있었다”면서 “(한국의 경우) 전통과 환경, 개발이라는 접점 사이에서 개발만 우선시해 아쉬움



지난 19일 총무원장 스님 예방에 이어 종단협 신년하례법회 행사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 있다”고 밝혔다. 또 2007년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토지 환매를 위한 우선협상권을 요청했지만, 당시 한전이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요청을 묵살한 점도 지적했다.

이에 문 전 대표는 “군 정발 토지의 경우, 해제되면 원소유자에게 우선권을 주게끔 되어 있고, 공용수용의 경우에도 그 목적이 끝났으면 원소유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인데 나중에 다른 사적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부당한 것”이라며 공감의 뜻을 내비쳤다. 문 전 대표는 신년하례법회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가진 질의응답에서도 “큰스님께서서는 정치가 가야할 중요한 방향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전통과 문화, 환경 등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는 뜻인데, 그런 것이 국가지도자가 갖춰야할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음날인 20일에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총무원장 스님을 예방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지난 10년간 세계 곳곳을 다니며 분쟁이 있는 곳에 화해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한 반 전 총장의 활동성과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세계 평화와 종교의 역할, 국제관계 등에 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

이날 총무원장 스님은 다종교 다문화 사회에서 사회 화합을 위해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하고, 법제화를 위한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인권 보호를 위해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지난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해 환담하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보수 종교계의 반대로 법안이 번번이 무산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이에 반 전 총장은 “차별금지법은 유엔헌장의 기본 원칙이며, 인종이나 성별, 연령, 신체적 특성, 장애 등 모든 것을 망라해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차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 대원칙”이라며 화답했다. 그러면서 “종교지도자들의 말씀 하나하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며 “특히 불교는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종교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화해와 관용의 자세를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사진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불교신문 페이스북
(www.facebook.com / ibulgyo)

대한불교조계종 제5교구본사
法住寺
www.beopjusa.org
문의 (043)543-3615 종무소교무팀

불기2561(2017)년

한국불교의 미래를 선도해 나가기로 학인스님을 모십니다

승가대학 신·편입생 모집

- 모집대상 • 1학년(신입) ○○명 • 2, 3, 4학년(편입) ○○명
- 모집기간 2017년 3월 13일 월요일까지 제출서류 접수 마감
- 전형일시 2017년 3월 13일 월요일 오후2시 강원 대강
-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승가대학 소정양식) 1부
 - 서약서(본 승가대학 소정양식)..... 1부
 - 사미증(수계증명서, 행자교육필증) 사본 1부
 - 은사스님 추천서 1부
 - 반명함판(사미의제, 만의 수한 사진) 3매
 - 수료증명서(편입생에 한함) 1부

■준비물 대가사(비구), 만의(사미), 장삼, 발우

- 특 전
 - 학문정진에 최적화된 편의시설
 - 전원 장학금 지급
 - 졸업여행경비 지원
 - 강의 교재 제공

법주사 승가대학장 정묵 원오



선학승가대학원 학인모집

- 모집인원 • 상주형 : ○○명 • 개방형 : ○○명
- 응시자격
 - 상주형 : 비구스님(2017년도 비구계수계 대상자 포함)
 - 개방형 : 비구 · 비구니스님(통학형)
 - 승가대학 또는 동등교육기관 졸업자 및 예정자
- 전형방법 서류접수, 면접
- 접수기간 2017년 3월 14일 화요일까지 제출서류 접수마감
- 전형일 2017년 3월 14일 화요일 오후2시 대학원 강의실
-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사 비치, 본사 홈페이지 자료실 게재) 1부
 - 수행이력서 1부
 - 기본교육기관 졸업증명서 1부
 - 승려증 사본 1부
 - 사진(3×4) 2매
- 특 전
 - 매월 연구비 지원
 - 강의 교재 제공
 - 졸업여행경비 지원

법주사 선학승가대학원장 청원